



# 한국외교 60년

# 제7장

## 외교통상부의 조직과 관련 기관

제1절 외교통상부 조직 및 기구 | 332

제2절 정원 및 예산 | 350

제3절 외교정책 연구와 외교관 교육 | 356

제4절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 | 363

## 제7장 외교통상부의 조직과 관련 기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발족한 ‘외무부’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 교섭과 대외 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 협정, 문화협력, 대외 홍보,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본부와 외교안보연구원 및 재외공관으로 조직되어 있다.

외교통상부는 무한경쟁의 국제환경 속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운영 및 예산을 외교환경 변화에 걸맞게 재조정하는 등 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 제1절 외교통상부 조직 및 기구

#### 1. 외교통상부 발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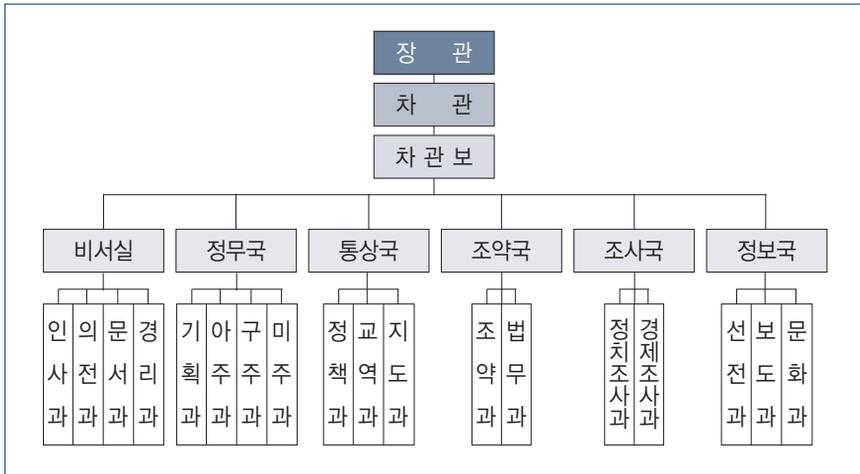
##### 가. 정부 수립-1950년대

1948년 7월 17일자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의 외교, 조약, 대외 경제, 재외국민, 국제정세의 조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무부가 발족되었다. 이어 8월 4일 초대 외무장관으로 장택상씨가 임명되어 과도 정부 외무처로부터 외무행정 사무를 인수받았다. 해방 후 미 군정

시대에 설치된 외무처의 관장 업무는 영사 사무에 불과하였으며, 재외공관으로 도쿄에 연락사무소, 오사카와 후쿠오카에 출장소를 두고, 상하이에 총영사관 그리고 텐진에 출장소를 두어 주로 교포 귀환 사무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4일자 대통령령 제19호로 외무부 직제가 공포되어 외무부는 비서실, 정무국, 통상국, 조약국, 조사국 및 정보국의 1실 5국 18과의 편제로 구성 발족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초대 외무장관으로 취임하였던 장택상 씨는 재임 4개월 만에 사임하고, 이어 12월 25일 임병직씨가 제2대 장관으로 취임하였으며, 장·차관의 교체와 함께 외무부의 기구가 대폭 감축되었다. 즉, 1949년 5월 5일자 대통령령 제86호로 외무부는 1실 3국 9과로 축소 개편되었다.

〈표 1〉 1948년 11월 4일 공포된 외무부 직제



1949년 6월에는 외무부령 제4호로 외무부 출장소 규정을 제정, 출입국 관리 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출장소를 부산과 인천에 설치하였고, 그 후 1954년 3월에는 중앙 행정기관 직제 통칙에 따라 비서실이 없어지고 비서실 소속 3개과는 차관 직속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부산으로 철수한 일부 직원들은 9.28 수복 시까지 부산 출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9.28 수복 후에는 중앙청 청사가 파괴된 관계로 옥인동 임시 청사에서 집무하다가 1.4 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부산에 임시 수도를 정한 정부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임하여 전시 행정요원 제도하에서 외무행정을 담당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성립 후 서울로 환도한 외무부는 태평로 청사에서 1960년대 중반 중앙청의 수리가 완성되어 이전하기까지 10여 년간 집무하였다. 환도 직후인 11월에는 재외공관과의 통신 시설을 신설하였다.

1954년 11월 29일자 헌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자 다음 해인 1955년 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54호)으로 외무장관이 수석국무위원이 되고, 1955년 2월 17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95호)으로 3국 10과로 개편되었다. 이 개편에 의하여 정무국 제1과는 대외정책의 기획 입안과 국제회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국제협력관계 사항 및 국제정치 조사·연구 사항을 분장하고, 제2과는 조약관계 사무를, 제3과는 섭외 사무, 이민 및 외국인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었다.

그 후 1956년 3월 9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39호)으로 3국 10과를 4국 11과로 개편하였으며, 1958년 9월 10일에는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390호)으로 방교국에 방교과를 신설하여 종래에 정무국에서 다루던 유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관계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정보과와 문화과를 정보문화과로 통합하였다. 한편, 통상국의 기획과 및 교역과는 제1, 2과로 개편하였다.

### 나. 1960년대

1960년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4월 25일에는 허정씨가 제5대 외무장관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그해 6월 15일자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직 임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허정 장관은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7월 1일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552호)으로 외무장관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수석국무위원이 되었고, 행정 각부에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게 되었다. 1961년 4월 22일자 국무원령 제245호 직제 개정으로 외무부 직제는 4국 11과에서 4국 18과로 개편되었다.

한편,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정부조직법 개정(8월 25일자 법률 제639호 및 10월 2일자 법률 제734호)으로 정무차관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 각부의 기획 수립, 심사, 분석 및 조정 업무를 다루는 기획조정관 1명을 두게 되고, 출입국 관리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하였다. 이후 1961년 10월 2일자 각령 제164호에 따라 4국 18과를 1실 5국 18과로 개편하였으며, 1962년 4월 26일자 각령 제677호에 따라 차관 밑에 법무관을 두게 되고, 같은 해 6월 18일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 1092호)으로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관실로 되고, 6월 26일자 직제 개정(각령 제839호)으로 정무국의 특수지역과를 없애고, 아주과를 동북아과와 동남아과로 분리하였다.

1963년 6월 24일자 각령 제1358호로 외무장관 소속하에 외무공무원교육원을 신설하고 원장 밑에 교수부와 총무과, 교무과를 두어 정원 10명을 배치하였다.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506호)으로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하고 법무관을 동 소속으로 하였다. 아울러 12월 16일자 직제 개정(각령 제1689호)으로 2실 5국 18과로 개편하여 문서국을 없애고, 정무국을 아주국과 구미국으로 분리하여 지역담당국으로 하였으며, 1965년 1월 5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30호)으로 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근무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외무공무원교육원을 외교연구원으로 개편하고, 연구부를 추가 신설하여 대외정책 입안에 관련된 국제 정세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966년 2월 28일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750호) 및 같은 날짜의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17호)으로 차관보를 신설하여 아주국, 구미국, 방교국, 통상국 및 정보문화국 소관 업무에 있어서 장·차관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또 5월 4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507호)으로 통상국의 경제조사과를 국제경제과로 개편하였다.

1967년 7월 21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157호)으로 2실 5국 18과를 2실 5국 22과로 4개과를 증설하여 국력 신장과 수출 교역 증대에 따른 지역과 및 통상진흥과를 보강하였다. 즉, 아주국의 동남아과를 동남아 제1, 2과로, 그리고 구미국의 미주과를 미주 제1, 2과로 분리하고, 중남미과를 신설하고, 통상국의 통상진흥과도 통상 제1, 2과로 분리하였다.

1969년 3월 24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823호)으로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을 신설하고, 이를 4월 25일자(대통령령 제3894호)로 비상계획관으로 개칭하여 차관 직속으로 하였다.

### 다. 1970년대

1970년 4월 3일자 외무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4842호)으로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및 의전실장을 별정직 대·공사로 보하고, 2실 5국 22과 외에 담당관제를 신설하였다. 즉,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을 신설하고, 의전실에 여권심사관, 통상국에 통상진흥관, 그리고 정보문서국에 특수지역연구관을 신설하였다. 동년 8월 3일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210호) 및 8월 17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5275호)으로 공보담당관을 장관 직속으로 하는 동시에 영사국을 신설하여 영사과와 아주국 교민과를 재외국민과로 개칭하고 여권과와 함께 영사국에 소속시켰다.

1971년 12월 28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5892호)으로 재외공관 정원 중 1할의 범위 내에서 국무총리 승인하에 본부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72년 3월 20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110호)으로 경제협력관을 통상국에 신설하는 한편, 6월 28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257호)으로 감사담당관을 기획관리실에 신설하였다.

1973년 1월 16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6456호)으로 2실 6국 23과를 2실 8국 30과로 확장 개편하는 동시에 경제차관보를 신설하여 국제경제, 통상 및 영사 교민 업무에 관하여 장·차관을 보좌하게 하였다.

1975년 3월 18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579호)으로 구아국을 구주국과 아중동국으로 분리 및 확대하여 2실 9국 33과로 개편하였다. 신설 아중동국에 심의관을 신설하였으며 구주국에는 구주 3과를 신설하여 동유럽 제국을 전담 토록 하였다. 1976년 5월 22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134호)을 통해서는 정보문화국 공보문화과를 홍보과와 문화교류과로 분리 개편하였다.

1976년 12월 31일자로 외교연구원을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대통령령 제8377호)하여, 원장 밑에 총무과, 연구실 및 교수부를 두고 연구실 실장 밑에 제1, 2, 3, 4 연구부를 두도록 하였다. 외교안보연구원과 관련해서는 1978년 6월 21일자(대통령령 제9052호)로 연구원에 1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하고, 동 위원은 대사·공사로 보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직제에 규정된 대사·공사 및 외무관의 정원 중 일부를 국무총리 승인하에 연구원에 배정할 수 있게 하고, 연구관은 1급 내지 3급 갑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게 하였다.

1977년 7월 14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624호)으로 종전의 2실 9국 33과를 2실 10국 39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교국을 국제기구국과 조약국으로 분리하고, 국제기구과를 1, 2과로 분리하였다. 둘째, 조약국 조약과를 1, 2과로 분리하고 국제법구과를 신설하였다. 셋째,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를 1, 2과로 분리하고, 영사교민국에 여권3과를, 기획관리실에 재외공관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977년 9월 20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698호)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승격시켜 차관 직속으로 두었다. 1978년 4월 3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918호)으로 지역국을 강화하여 종전의 지역과를 담당관제로 대폭 개편하고, 문서통신관리관실을 외신문서국으로 승격 개편하여 2실 11국 33과 24담당관제로 변경하였다.

1979년 2월 14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326호)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아중동국을 중동국과 아프리카국으로 분리 개편하고, 외교정책상의 특수문제에 관하여 기동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각 지역국장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관을 분리하여 차관 직속으로 통합 설치하였다.

### 라. 1980년대

1980년 4월 10일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843호)으로는 의전실장 밑에 의전 심의관을 신설하였다. 1981년 3월 14일자(법률 제3384호)로 외무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 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목적으로 외무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11월 2일자(대통령령 제10502호)에 의하여 국제기구국과 조약국을 국제기구조약국으로, 국제경제국과 통상국을 경제국으로 통합하는 한편, 외신문서국을 폐지하고 그 하부 조직의 소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종전 2실 12국 34과를 1실 9국 36과로 개편하였다.

1983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1319호에 따라 보건사회부로부터 해외 이주 업무를 이관받아 해외 이주과를 경제국에 두었으며, 1985년 2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1621호로 외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외공관 정원 중 5% 범위 내의 인원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본부 또는 외교안보연구원에 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보문화국에 정세분석관을 신설하고, 아주국, 미주국, 및 경제국에 심의관을 신설하였다.

1987년 4월 3일자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2130호)으로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역할 강화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동향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외교의 강화, 대외 홍보 및 문화외교의 강화와 외무 행정의 전산화 등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였다. 즉 1981년 경제국으로 통합되었던 국제경제국과 통상국이 다시 분리되는 한편, 중동국과 아프리카국이 중동아프리카국으로 통합되었으며, 정보문화국의 홍보문화과가 홍보과와 문화과로 분리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외무 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전산담당관을 신설하였다.

## 마. 1990년대

1991년 5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3376호에 따라, 종합적인 중·단기 외교정책의 효율적 수립 추진을 위하여 외교정책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밑에 정책심의회 3인과 정책총괄과 및 안보정책과를 신설하였다. 한편, 재외공관의 효율적 지원 및 국유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심의회 2인과 국유재산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993년 1월 30일자(대통령령 제13827호)에 따라, 의전장 아래 의전관을 의전심의회관으로, 특전담당관을 주한공관담당관으로 개칭하고, 기획관리실 소속 재외공관담당관 및 국유재산담당관을 재외공관1담당관 및 재외공관2담당관으로, 아주국 소속 서남아과를 서남아·대양주과로 개칭하였다.

1994년 4월 21일자 대통령령 제14216호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국제외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며 외교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부의 과 조직 중 6개과를 축소하고 1개과를 신설하였다. 즉 재외공관1, 2담당관을 재외공관담당관으로, 중동1, 2과를 중동과로, 아프리카1, 2과를 아프리카과로, 문화협력1, 2과를 문화협력과로, 재외국민1, 2과를 재외국민과로, 여권1, 2과를 여권과로 통합하였다. 국제기구과의 유엔1과, 유엔2과, 국제기구과는 유엔 기능에 맞추어 유엔정책과, 유엔경제과, 인권사회과, 군축원자력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5년 12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4824호는 높아진 한국의 외교적 위상에 부응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무부 본부의 국·과 단위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하려는 취지하에 기획관리실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하고, 외무인사기획담당관을 신설하여 종전에 법무담당관이 담당하던 조직 및 정원 관리, 외무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96년 11월 21일자 대통령령 제15172호는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남미 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보강하는 등 일부 조직을 조정하였다. 즉 미주국을 북미국과 중남미국으로 분리하여 북미국에 중전의 북미1과 및 북미2과와 심의관 외에 북미3과를 신설하여 2실 11국 42과로 개편하였다.

1997년 6월 25일자 대통령령 제15399호에 따라, 국제경제국 내에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기구과를 신설하였다. 1998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 15710호, 3월 3일자 외교통상부령 제1호에 따라 통상 및 통상 교섭과 대외 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통상교섭본부에는 통상교섭조정관, 3국(통상지원, 지역통상, 다자통상), 13팀을 설치하고, 외교정책실과 국제연합국을 외교정책실로 통합하여 2실 12국 38과로 개편하였다.

1999년 5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6336호에 따라, 통상지원국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지역통상국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경제·통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국을 통상교섭본부로 이관하였다.

## 바. 2000년대

공직 내에 민간의 우수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공직 사회 내의 경쟁 활성화로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2호)됨에 따라, 2000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6725호에 의거, 각급 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 중 일부를 공직 내외에 개방하기 위한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외무공무원 중 외교직과 외교통상부소속 5급 이상 행정직을 외교통상직 공무원으로 통합한 외무공무원법 개정(1999년 8월 30일, 법률 제5991호)으로 2000년 3월 4일자 대통령령 제16746호에 따라 직급의 명칭·정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관련조항을 정비하였다.

2001년 6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7276호로 외무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하여

개별 직위에 보하는 요건을 각각 직급별로 정하던 것을 직렬로만 정하도록 직위분류제로 조정하였다. 2003년 4월 7일에는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7958호)으로 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의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을 설치하였다.

2004년 3월 22일자 대통령령 제18328호에 따라,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조직·정원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동년 10월 21일자 대통령령 제18564호에 따라,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널리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에 자유무역협정국을 신설하였다.

2005년 4월 15일자 대통령령 제18786호에 따라,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부서를 정책홍보관리부서로 개편하였고, 7월 22일자 대통령령 제18956호에 따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였다. 같은 해 12월 9일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166호)으로 국제기구국과 정책기획국을 설치하고,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 기능 및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정책실에 대테러국제협력과와 재외동포영사국에 2개과를 신설하여 1실 14국 65과·팀으로 개편하였다.

2006년 3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9417호에 따라,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한·미 간 FTA의 추진을 위한 한·미자유무역협정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였다.

2007년 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9914호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FT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국을 자유무역협정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외무공무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안보연구원에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을 담당할 외교역량평가 기획단을 설치하였다.

2008년 2월 29일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673호)으로 대국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국을 통합하여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다자외교실과 조약국을 통합하여 다자외교조약실을 신설하였으며,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와 기후변화 국제 협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관 직속의 에너지자원대사와 기후변화대사를 각각 설치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FTA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통상교섭본부에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1명과 자유무역협정정책국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국 2개국을 두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2008년 12월 31일(대통령령 제21241호)에 따라,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실무 인력의 확대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기능 및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한 대과 체제를 적용하여 종전 2실 13국 86과·팀을 1실 17국 68과·팀으로 개편하였다.

## 2. 재외공관 현황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은 2008년 154개에 이르며, 동 공관망은 한국외교의 성장 과정과 더불어 꾸준히 확장되며 발전해 왔다.

1945년 8.15 광복 후 미 군정하에 외무처가 있어서 그 재외기관으로서 도쿄에 연락사무소, 상하이에 총영사관, 오사카와 후쿠오카 및 텐진에 출장소를 두어 광복 직후의 교포 송환 사무를 취급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그해 가을 유엔 총회에서 48:6으로 채택된 결의(총회 결의 제195호 Ⅲ)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 한편, 1949년 1월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중화민국, 영국, 프랑스 등 우방 제국들의 개별적인 정식 승인을 얻게 되자, 정부는 이들 우방 제국과 국교를 맺고, 대사관 또는 공사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일본과 유엔에는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한편, 교포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통상·항해상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및 홍콩 등에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설치하고,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와 후쿠오카에는 주일대표부 연락사무소를 두어 교포에 대한 보호·지도 업무를 개시하였다.

1948년 11월 17일자로 외교관 및 영사관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1950년 3월 9일자로 재외공관 설치에 관한 기본법인 재외공관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정부 수립 후 한국은 1949년 3월 미국에 대한민국 최초의 대사관을 설치한 것을 필두로 1949년 8월 중화민국, 1957년 2월 필리핀, 1957년 6월 영국과 터키, 1958년 4월 월남, 1958년 8월 서독, 1958년 10월 프랑스, 1959년 4월 이탈리아 등에 차례로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1959년 말까지 설치되었던 재외공관은 대사관 9, 총영사관 8, 대표부 3, 출장소 2개소에 이르렀다.

1960년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집권 기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책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부의 수립과 함께 중립국에 대한 적극적 외교정책과 수출 증대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 시책에 따라 재외공관망은 대폭 확장되었다.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의 재외공관 설치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 1960년대에는 4개 상주대사관, 8개 총영사관, 5개 영사관과 통상 대표부 및 출장소가 각각 하나씩 신설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에 앞서 영사 또는 통상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미주 지역의 경우, 1950년대 말까지 주미국 대사관이 유일한 상주대사관이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 22개국과 수교에 합의하여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및 우루과이 6개국에 상주대사관을 신설하고, 기타 16개국에는 겸임대사를 두었으며, 시카고, 밴쿠버 및 상파울로의 4개 도시에는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유럽 지역의 경우, 1960년 말까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의 4개 대사관과 주제네바 대표부가 있을 뿐이었는데, 1961년부터 1970년 사이에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6개국에 상주대사관을, 그리고 독일의 함부르크에는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주벨기에 대사관은 유럽 경제공동체(EEC: Europe Economic Community) 대표부 업무도 겸하도록 하였다.

중동 지역의 경우, 1960년 이전에는 주터키 대사관 하나뿐이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 모로코, 이란, 튀니지, 이집트 및 레바논에 공관을 설치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1960년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수교하기 시작하여 케냐,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카메룬, 자이르, 어퍼볼타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다. 1961년 8월에 콩고(브라자빌)와 수교했다가 1965년 5월에 단교했으며, 모리타니아와는 1963년 7월에 수교하였으나, 모리타니아측이 북한과도 수교하자 1964년 12월에 단교(1978년 12월 재수교)하였다.

1962년 11월 23일자 각령 제1049호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한 건’ 규정을 제정하여 1960년대부터 친한 저명 외국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하여 상주공관 미설치 지역 또는 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일부 영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상과 같이 1960년대의 중립국에 대한 적극 외교 전개로 한국의 외교망은 1970년 말에 대사관 36, 대표부 3, 영사관 24, 출장소 2개소 등 총 상주공관 수가 65개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 신장으로 외교망은 더욱 확장되어, 1971-1975년간 40여 개 공관이 늘어나 1978년 상주공관 수가 108개에 달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 지역에는 10개 대사관과 2개 영사관이 설치되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및 버마(미얀마)는 1960년대에 개설된 총영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고, 싱가포르, 네팔 및 스리랑카는 1970년대에 총영사관 또는 통상대표부가 개설되었다가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1975년 4월 월남이 월맹에 통일되면서 월남 및 크메르(캄보디아)에서는 1975년 4월, 그리고 라오스는 1975년 8월에 공관을 철수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도 좌경 혁명정부 수립 후 1978년 9월에 공관을 철수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피지, 파푸아뉴기니에 대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이슬라마바드 총영사관이 1983년 11월 대사관으로, 그리고 1984년 1월 브루나이의 반다세리베가완 총영사관이 설치된 지 3개월 만에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 큰 발전이 있었다.

또한 미주 지역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 중남미 지역의 11개국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는데, 이 중 10개국은 1960년대에 수교하였으나 주변국에서 겸임하던 나라에 상주공관을 개설한 것이며, 신생 독립국 수리남에는 총영사관을 설치했다가 독립 직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 거주 동포 사회의 급성장과 한·미관계의 심화에 맞추어 보스턴, 마이애미 및 앵커리지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 기구 조정 계획에 따라 마이애미와 보스턴 주재 총영사관은 개설 3년 만에 폐관하였다. 한편,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진출을 위하여 바베이도스와 엘살바도르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유럽 지역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 6개 대사관과 4개 총영사관을 설치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아일랜드에 대사관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 대표부를 설치하였으나 이스탄불, 밀라노 및 암스테르담 소재 총영사관이 폐쇄되었다.

중동 지역에는, 1960년대 말까지 이란, 모로코 및 튀니지 3개국에 상주대사관이 있었을 뿐이나, 1970년대에 들어와 6개 상주대사관과 통상대표부 및 총영사관을 각각 하나씩 개설하였다. 그 후 쿠웨이트와 트리폴리의 통상대표부와 총영사관이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바그다드에 총영사관, 예멘 아랍 공화국에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 6개 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그 후 4개 대사관이 추가 개설되었다. 르완다에는 1972년 6월 23일 상주공관을 개설하였다가 1975년에 철수한 바 있으나, 1987년 8월 1일 재개설되었다.

1991년 2월 1일 조직 관계 법령을 중앙 행정기관 단위로 통합함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를 폐지하고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단일화 하였다. 한편, 1993년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치민시에 총영사관을 신설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및 이스라엘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그루지야 공화국 등은 각각 잠비아 및 러시아 대사관에서 겸임하도록 하였고, 상주의 필요

성이 감소된 주모리타니아 대사관을 폐쇄하고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겸임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주수리남 대사관과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을 폐쇄하였다.

1995년에는 주이집트 및 짐바브웨 대사관을 신설하는 한편, 주나미비아 및 우간다 대사관을 폐쇄하였다. 또한 1997년 1월 4일에는 전년 한국이 OECD 회원국이 됨에 따라 주OECD 대표부를 신설하였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시행된 정부 조직 개혁 조치의 하나로 재외공관 감축 조치가 이루어져,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 잠비아, 카메룬,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볼리비아, 예멘, 바레인, 콩고의 대사관과 쯤다, 카라치, 앵커리지, 마이애미, 하갓냐, 함부르크, 라스팔마스, 베를린의 총영사관 등 18개 공관을 폐쇄하고, 주벨기에 대사관은 주구주연합 대표부와, 주 UNESCO 대표부는 주프랑스 대사관과 통합하였다.

2001년에도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주고베 총영사관을 폐쇄하여 주오사카 총영사관의 영사 관할구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주뎬바이 총영사관을 폐쇄하여 주인도공화국 대사관의 영사 관할구역에 포함하도록 하여 2001년 재외공관 수는 1997년 145개에서 124개로 줄어들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 남부지역에 진출한 한국 교민 및 기업에 대한 영사보호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에 주광저우 총영사관을 신설하였고, 2002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민주화 진전 및 경제재건 추진에 따라 외교·경제협력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이후 폐쇄되었던 주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 대사관을 재개설하였으며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우루과이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주중국 대사관 소속 주선양 사무소를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승격·개설하였으며, 2004년에는 주청투 총영사관을 신설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한국 국민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며, 재외국민 보호 활동 강화 등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공관망을 대폭 확충하였다. 2006년에는 주아제르바이잔, 주슬로바

키아, 주온두라스 대사관 및 주시안,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5개 공관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에는 주니카라과, 주벨로루시, 주앙골라, 주예멘, 주크로아티아,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및 주두바이, 주밀라노, 주젯다,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10개 공관을 증설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147개로 회복하였다.

2008년에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확대와 ‘에너지외교 강화’를 위해 주볼리비아, 주카메룬, 주콩고민주공화국, 주트리니다드토바고, 주키르기스스탄 대사관과 주러시아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6개 공관을 신설하였고,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활동’ 지원 목적으로 주 오사카 총영사관 고베 출장소를 고베 총영사관으로 격상·설치하여 2008년 재외공관 수는 154개로 증가하였다.

정부 수립 후 60여 년에 걸쳐 확장되어 온 재외공관망을 북한과 대비하여 지역별 및 공관 종류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재외공관 현황

지역별	공관별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아 주		24(14)	19(2)	1	44(16)
미 주		21(4)	13	1(1)	35(5)
구 주		34(12)	7(1)	2(2)	43(15)
중 동		17(5)	2	(1)	19(6)
아프리카		13(7)			13(7)
계		109(42)	41(3)	4(4)	154(49)

※ ( )는 북한

(2008년)

### 3. 주한 외국 상주공관 현황

1948년 8월 23일 최초로 미국이 서울에 외교대표부를 개설한 후, 다음해인

1949년 4월 20일 미국은 이를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승격시켰으며, 뒤이어 1949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사관을, 그리고 자유중국이 각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서 필리핀, 교황청, 월남(1975년 4월 철수), 이탈리아, 터키 및 서독의 6개국 공관이 설치되고, 1960년대에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파나마, 브라질, 일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네덜란드, 스위스, 칠레 등 12개국이 공관을 개설하였다. 1970년대에는 벨기에, 우루과이,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가봉, 이란, 과테말라, 멕시코, 덴마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14개국이,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에 페루, 노르웨이, 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오만, 아이티, 파라과이, 오스트리아,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모로코 등 무려 20개국이 공관을 개설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라이베리아가 1983년 10월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나이지리아가 뒤를 이어 1987년 12월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공산 국가로서는 헝가리가 처음으로 1988년 12월 상무관을 파견하였다. 한편, 1978년 말 23개였던 주한 명예영사관은 1988년 말에 54개로 대폭 증설되었다.

2009년 현재, 1988년 말 55개이던 대사관의 수가 9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2009년 현재 이들 주한 공관 설치 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지역별 주한 외국 공관 설치 현황

지역별	공관별	대사관	(총)영사관	계
아시아·태평양		23	4	27
미주		18	1	19
유럽		33	1	34
아중동		24	1	25
계		98	6	104

※ 아중동 (총)영사관은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임

(2009년 5월)

한편, 1988년 말 9개이던 주한 국제기구는 현재 12개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 유엔 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 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아·태 문화·사회센터,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철수하고, 새로이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한-ASEAN 센터 등이 한국에 주재하였다.

#### 〈표 4〉 주한 국제기구 현황

1.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2.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3. 국제백신연구소: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
4.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 United Nations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UN-APCICT)
5. 유엔 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6. 북서태평양보전계획: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UNEP-NOWPAP)
7. 유엔 거버넌스센터: United Nations Governance Centre (UNGC)
8. 유엔 난민최고대표: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9. 유엔 공업개발기구: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Investment Technology Promotion Office (UNIDO-ITPO)
10. 유엔 기념묘지관리처: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11.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2. 한-ASEAN 센터 (ASEAN-Korea Center)

## 제2절 정원 및 예산

### 1. 정원의 변천 및 증가

#### 가. 초창기-1950년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외무부는 정원 160명으로 출발하였으나, 1949년 5월에 외무부 직제가 대폭 축소·개편되면서 정원도 80명으로 감축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시에는 일부 직원만이 부산에 모여 부산 출장소에서 집무하였으며, 9.28 수복으로 환도하였다. 그 후 1.4 후퇴로 재차 부산에서 임시 행정요원 제도하에 불과 30여 명의 직원으로 외무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활발한 외교가 요청되자, 1952년에는 전시 행정요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는 예산 및 인원 면에서 확충·강화되었다. 즉 1952년에 처음으로 재외공관 정원제를 도입하여 종전의 본부와 재외공관을 합하여 정원 80명이던 것을 본부 81명, 재외공관 96명, 총 177명으로 증원하였다.

1953년 정전협정 후 9월에 정부는 초긴축 재정정책으로 국가공무원 전반에 걸친 감원조치를 취하게 되어, 외무부 정원은 본부 및 재외공관 각각 53명과 68명으로 되어 56명의 정원이 감축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통신 시설이 설치되어 통신사 16명을 본부 정원에 추가하였다.

그 후 정부의 외교망 확충 노력과 함께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외무부는 1954년과 1955년에 재외공관 근무 인원을 각각 14명과 74명을 늘린 데 이어, 1958년에는 본부 인원을 20명, 재외공관 인원을 30명 증원하여 1950년대 말 정원은 275명이 되었다.

#### 나. 1960년대

1960년대에 들어와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외무부 직제

개편과 더불어 정원도 대폭 변동되었다. 즉, 1960년 7월 213명이던 정원이 1961년 4월에는 384명이 되어 9개월간 171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는 1958년의 275명에 비하더라도 109명이나 많은 숫자다.

한편,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에 재외공관 정원 63명의 감원과 1964년 정부의 5% 인건비 삭감책에 따른 10명의 정원감원 조치가 취해졌다. 이를 제외하고는 군사정부의 중립국에 대한 적극 외교정책에 따른 직제 개편과 재외공관망의 대폭적인 확장으로 매년 외무부 정원의 증가를 가져와 1970년 말에는 정규 직원 정원 수가 560명에 달하여 1950년대 말 정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다. 1970년대

5.16 군사정변 후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 신장에 부응한 외무부 기구의 확대 개편과 재외공관망의 확장으로 외무부 정원도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78년 말 정규 직원 정원은 973명에 달하였다.

#### 라. 1980년대

1979년부터 한국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확대하여 나감에 따라 외무부 각 부서의 담당 인원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어 갔다. 따라서 1980년에는 총 38명이 증원되었으며, 1987년에는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2000년대의 국가 발전 목표에 따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앙 행정기관의 실무 기획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외무부도 50명의 대폭 증원이 있었다.

1988년에도 하계올림픽게임 개최 등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역할 강화와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34명의 증원이 있었다.

### 마. 1990년대

1990년대 들어 한국이 유엔 및 OECD에 가입하고, 러시아, 중국 및 동유럽 구공산권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외교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해 갔다. 이에 따라 외무부 정원도 1991년 1,730명에서 2년 후인 1993년에는 1,757명으로 27명이 증가하였다.

그 후 외무부 정원은 대체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확대되면서 통상교섭본부(본부장은 정무직)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정원은 정부 조직 축소 개편에 따라 1997년 1,664명으로부터 1998년에 1,579명으로 85명이 감축되었으며, 이후 1999년에는 1,526명으로 53명이 추가로 감축되었다.

### 바. 2000년대

2000년대 들어 세계화 심화에 따른 외교업무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한국 국민의 대외 활동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정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FTA 체결 추진, 평화 외교 강화, 영사·민원서비스 제고, 재외국민 보호 및 에너지자원 확보, 지역외교 수요의 증가,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으로 외교통상부 정원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말에는 영사정책 기능, 대테러 국제협력 기능, 재외공관 신설에 따라 84명을 증원하였고, 2006년 초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획단 설치 등에 따라 73명을 증원하였다. 2007년 7월에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외교기능 강화와 재외공관망의 확충에 따른 197명의 실무인력을 보강하여 2008년 1,923명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연도별 외교통상부 정원 및 재외공관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외교통상부 정원 및 공관 수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관수	125	125	124	128	129	130	132	137	147	154
정 원	1,526	1,526	1,519	1,527	1,533	1,571	1,618	1,730	1,944	1,923
본 부	767	767	767	767	768	802	834	911	996	975
공 관	759	759	752	760	765	769	784	819	948	948

## 2. 예산 규모의 추이

정부 수립 후 2009년까지의 외교통상부 예산 규모 추이는 〈표 6〉에서 보듯이 정부 수립 초창기에는 정부 일반 회계 예산의 약 0.4%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대외 관계 확대 추세와 더불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1960-1970년대에는 정부 예산의 1% 전후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외교부 예산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1988년 정부 예산의 0.79%, 1998년 정부 예산의 0.78%가 되었고, 최근 10여 년간 정부 예산의 0.6-0.7% 규모를 유지하였다. 2007년에는 외교부 예산액이 최초로 1조 원을 상회하였고, 2009년에는 추경 예산 281억을 포함, 정부 예산의 0.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연도별 외교통상부 예산과 정부 예산 비교

(단위: 억 원)

연 도	외교부 예산	정부 예산	구성비(%)
1948	1.2	300	0.4
1958	12	2,871	0.4
1968	26	2,657	0.99
1978	35	35,387	0.99
1988	1,426	180,250	0.79

연 도	외교부 예산	정부 예산	구성비(%)
1998	5,868	755,829	0.78
2000	5,617	887,363	0.63
2001	5,617	941,246	0.60
2002	6,454	1,058,767	0.61
2003	6,990	1,114,831	0.63
2003(추경)	7,590	1,181,323	0.64
2004	7,755	1,183,560	0.66
2005	9,011	1,343,704	0.68
2006	8,800	1,448,076	0.61
2007	10,959	1,565,177	0.70
2008	11,678	1,749,852	0.66
2009	12,890	1,968,713	0.66
2009(추경)	13,171	2,035,497	0.6

※ 예산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기준임.

다음으로 외교통상부 예산을 본부와 재외공관으로 나누어 구성비를 보면, 1988년 본부 39.3%, 재외공관 60.7%였으나, 본부의 예산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본부 40.9%, 재외공관 59.1%, 2009년의 경우에는 본부 68.4%, 재외공관 3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예산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편성되는 재외공관 예산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외교통상부 예산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8년 1.61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89.4%에서, 1998년 3.21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71.1%, 2009년 5.61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47.9%로 낮아졌다.

또한 2009년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보전을 위해 추경 예산 281억 원이 편성되어 달러 예산 비중이 큰 재외공관 예산에 주로 반영됨에 따라, 예산 구성비가 본부 67.4%, 재외공관 32.6%로 변경되었다.

〈표 7〉 본부 및 재외공관 예산 구성

(단위: 백만 원, 1,000달러)

구분	1988		1998		2008		2009		2009(추경)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합계	142,570 (\$161,356)	100	586,765 (\$321,076)	100	1167,803 (\$586,849)	100	1,289,028 (\$561,301)	100	1,317,103 (\$496,546)	100
본부	56,072 (\$51,864)	39.3	240,232 (\$83,943)	40.9	807,970 (\$292,563)	69.2	882,092 (\$270,054)	68.4	888,327 (\$250,766)	67.4
재외공관	86,498 (\$109,492)	60.7	346,533 (\$237,133)	59.1	359,833 (\$294,284)	30.8	406,936 (\$291,247)	31.6	428,776 (\$245,780)	32.6

※ 괄호안의 달러화 예산은 전체 예산 중 달러화로 책정된 예산임.

※ 기준 환율(1\$): 1988년 790원, 1998년 1,300원, 2008년 920원, 2009년 1,100원, 2009년(추경) 1,300원

### 3. 해외 주재관 제도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행정 각 부처 직원의 정원은 1976년 175명에서 1978년 말에 197명으로 늘어났다. 1976년 3월 재외공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013호)으로 무관 이외의 각 부처 파견 주재관을 동 직제 제11조 해외 주재 공무원 정원으로 규정하여 주재관 제도를 일원화하였다.

그 후 해외 주재관 수가 1980년 말에는 206명에 이르렀으나, 1981년 1월 대통령령 제10130호에 따라 140명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이후 주재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238명에 이르렀으나, 1998년 대통령령 제15824호로 재외공관에 과다하게 파견된 주재관을 감축키로 하여 2001년 22개 부·처·청의 주재관 수는 191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재외공관 신설에 따른 소요 인력 보강과 경제 산업 활동지원 및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주재관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265명의 주재관이 파견되었다.

〈표 8〉 주재관 정원 변동 추이

(단위: 명)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재관 정원	213	215	191	205	205	205	235	258	265	265

## 제3절 외교정책 연구와 외교관 교육

### 1. 외교안보연구원 설립과 발전

#### 가. 발전 과정

1962년 10월 미국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과 우리 정부는 ‘외교관 훈련을 위한 청사건축비 원조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63년 6월 각령 1358호로 ‘외무공무원교육원(EIFSO: Educational Institute of Foreign Service Officers)’ 직제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외교안보연구원(IFAN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은 외무공무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로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1965년 1월 대통령령 제2030호에 따라 외교문제에 관한 연구 기능을 보강하면서 외무공무원교육원이 ‘외교연구원(RIFA: Research Institute of Foreign Affairs)’으로 개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무부·연구부·교육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1975년 청와대 안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전략 문제를 체계적·조직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 관계기관, 연구소, 학회 등의 연구 활동을 통할·조정해 나갈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6년 12월 외교연구원은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 연구부의 명칭을

‘연구실’로 변경하였고, 연구실 내에 4개의 부를 두어 각각 외교, 군사, 공산권·통일, 국내문제를 다루도록 하였다.

그 후 외교안보연구원은 1985년 2월 대통령령으로 연구실을 종래의 4개 연구부에서 지역 및 기능별로 6개 연구부(아주·미주·구주·아중동·국제경제·안보전략)로 개편하였으며, 1989년 1월에는 연구부의 명칭을 안보통일연구부, 중국연구부, 소련·동구연구부,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서구·아중동연구부 및 국제경제연구부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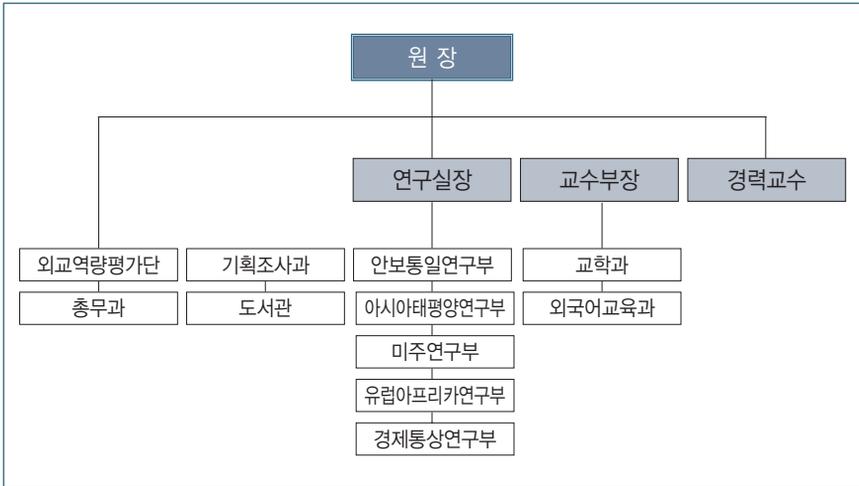
1991년 5월 제정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376호)’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은 외무부로 통합되었으며, 또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5710호, 1998년 2월 28일, 제정; 대통령령 제21363호, 2009년 3월 25일, 일부개정)’에 의거, 현재까지 직무상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을 병행 수행해 오고 있다.

## 나. 설립 목적과 직제

외교안보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2009년에 일부 개정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직무)에 잘 나타나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직무상 역할을 대략 살펴보면, 첫째, 국가안보 및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며, 둘째,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외교정책 입안에 기여하고, 셋째,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다른 기관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넷째, 고위 외무공무원 후보자, 참사관급·신규 외무공무원의 역량평가 계획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교육·역량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안보연구원은 2009년 현재 <표 9>와 같은 직제를 가지고 있다.

〈표 9〉 외교안보연구원 기구



## 2. 외교정책 연구

1963년 발족한 ‘외무공무원교육원’은 주로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자와 해외 발령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치중하였으나, 1965년 ‘외교연구원’으로 개편되면서 외교정책의 연구도 겸하였다. 특히 1970년에 들어오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연구원의 직제를 세 차례나 개편하여 국제정세 조사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외교정책 연구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문적인 연구진 부족, 비치 자료 미비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외부에서 위촉된 교수들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주로 외교 실무를 바탕으로 한 국제정세 변화의 파악과 분석, 그리고 단기 외교정책 연구가 활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76년 말 외교연구원이 ‘외교안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연구실은 교수

정원 12명으로 전문 연구진을 충원하여 외무부의 주요 시책인 안보외교, 경제·문화외교, 평화통일 기반조성 외교를 목표로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실의 각 연구부 명칭이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현재의 명칭은 외교통상부령인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1989년, 1992년, 1994년, 1998년, 2008년에 부분 개정된 동 규칙에 따라 연구실은 현재 연구실장 밑에 안보통일연구부,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유럽·아프리카연구부 및 경제·통상연구부 등 5개 연구부를 두고 있다.

〈표 10〉 연구부 명칭의 변천 과정

1989년	1992년	1994년	1998년	2008년
안보통일연구부	안보통일연구부	안보통일연구부	안보통일연구부	안보통일연구부
중국연구부	중국연구부	아·태연구부	아·태연구부	아·태연구부
아·태연구부	아·태연구부			
		미주연구부	미주연구부	미주연구부
소련·동구연구부	러시아·동구연구부	구주연구부	구주·아프리카연구부	유럽·아프리카연구부
서구·아중동연구부	서구·아중동연구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		
국제경제연구부	국제경제연구부	경제·통상연구부	경제·통상연구부	경제·통상연구부

연구실 연구 인력은 1998년 정부 인원감축 정책에 따라 16명까지 늘어났던 교수가 15명으로, 그리고 연구원은 10명에서 8명으로 감원되었고, 이후 개방형 직위제 도입 및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2009년 현재 고위공무원단 소속 연구실장(교수) 1명, 교수 14명, 연구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은 한국의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에 관한 심층적 연구뿐만 아니라, 미·일·중·러는 물론 유럽·동남아·중동(중양아 포함) 지역의 정책 연구기관과의 학술회의 개최 등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한경비즈니스’가

조사한 ‘100대 싱크탱크’ 외교·안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외교안보연구원은 대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외교·안보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외교·안보 현안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 증대 및 대국민 외교 강화 등을 배경으로 외교안보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3. 교육훈련

#### 가. 외무공무원 교육의 시작

외교안보연구원은 1963년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발족하였다. 교육원을 설립하기 전에는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거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직원 교육 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그 인원이 제한되고 전문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교육원은 1963년 10월 초급 외무공무원을 위한 보통반을 최초 개설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외교관으로서의 전문 자질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어 과정으로서 영어반과 불어반을 개설하였으며, 해외근무 발령 직원을 위해 해외파견반 교육을 실시하였다.

#### 나. 전문 외교관 양성을 위한 제도의 보완 및 확충

외교업무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외교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되며, 외교관의 전문지식, 협상력과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한국외교의 영역은 전에 없이 확대되었고, 외교관들은 점점 더 다양하고 깊은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외교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연구원은 시의성 있는 전문 분야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보완해 왔다. 즉 전통적 정치 안보

이슈 이외에 경제·통상 관련 과목들을 대폭 보완하고, 대테러·군축·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등 새로운 주제 과목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또한 급증하는 외교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훈련을 통한 실무 기술의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이론, 국제회의 의사규칙 등 외교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협상 사례, 다자 모의회의 등 참여식 실습 교육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실질적 외교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 주제 과목을 개발하고, 한국이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문화·인권·기여 외교 등 연성국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교육훈련 내용을 다각화하고 교수 요원과 교육 운영 기법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연구원은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개선하였다. 채용 경로별로 외교통상직 기본 과정, 외무영사직 기본 과정, 특채 및 전입 기본 과정을 두고, 경력 단계별로 중견관리자 과정, 고급 외교관 과정 등을 실시하여 맡은 바 소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연구원은 우수한 외교 인력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지식 배양, 외국어 구사능력의 실질적 향상 및 국제인으로서의 소양 함양이라는 3대 목표에 역점을 두고 국외 연수를 추진해 왔다. 1983년 이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매년 30여 명의 초임직원을 해외 우수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기본 연수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제2외국어도 연수언어에 포함시켜 지역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나아가 과장급 이상 전문분야 연수과정, 고위외무공무원 대상 정책 연수과정을 신설 확대하여 전문분야 지식과 경험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교육 대상의 확대와 열린 외교의 구현

세계화의 빠른 진전은 한국 사회에 국제교류 및 국제관계 지식의 수요를 급증시

졌고, 외교안보연구원은 열린 외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관계 실무 종사자들을 위한 단기 훈련과정으로 각기 1992년과 1993년 ‘국제회의 전문요원과정’, ‘국제화 및 의전과정’을 개설하고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기법, 외교문서 작성법, 국제 예절 및 소양을 함양하게 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국제관계 장기 전문가 과정인 ‘글로벌 리더십’ 과정을 출범시키고, 정부부처 국·과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교육생들은 10여 개월에 걸쳐 국제정세 지식과 대외교섭력 제고를 위한 집중 훈련을 받으며, 유관부처 간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연구원은 또한 2000년 이래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국제 외교관 연수과정’과 ‘주한 외교관 한국 이해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친한 외교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 세대의 국제적 안목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공외교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 4. 외교역량평가 및 개발교육

외교통상부는 2005년 11월 국가 외교역량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제도를 개정, 외교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2월 외교역량평가단(구 외교역량평가개발센터)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참사관급 및 고위 외무공무원 최초 임용이 가능하였다.

외교역량평가단은 전·현직 공관장과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직급별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역량개발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직원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교역량평가 및 개발교육 제도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객관적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자기개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외교부 전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제4절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

현재 외교통상부에는 3개의 산하 기관이 있으며 각각의 설립 목적을 바탕으로 외교통상부 본부와 협력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선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근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에 의거,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ICA는 1991년 4월 1일 설립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현재 본부는 이사장, 감사(비상근), 4인의 이사와, 6부, 5실, 1반, 2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사무소는 아시아 11개소, 아프리카 7개소, 중남미 5개소, 중동·CIS 5개소 등 27개국에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튀니지, 팔레스타인 등 5곳에 주재원을 파견 중이다. 직원 수는 해외 사무소 및 주재원 55명을 포함, 총 225명이다.

KOICA는 개발도상국의 원조 수요에 부합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경제·사회발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7대 중점지원 분야를 설정하여 교육(Education), 보건의료(Health), 행정제도(Governance),

지역개발(Rural Development), 정보통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 및 에너지(Industry & Energy), 환경 및 여성(Environmental & Others)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인프라 구축, 개발 조사 및 연수생 초청, 해외봉사단 파견, 전문인력 파견, 민간단체 지원 등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기후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는 개발협력을 통한 외교·경제협력 기반 강화 및 우리의 국력 신장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관련되는바, KOICA는 다음의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 중이다. 첫째,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기여외교를 확대 하며, 둘째,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추세에 따라 ODA 집행 체제를 개선하며 KOICA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셋째, ODA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수원국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2.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전세계에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1991년 12월 30일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2실 6부, 1개 센터, 6개 해외사무소, 1개 검사역의 조직하에 정원 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며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외의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결과를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재단은 외교통상부와 긴밀한 협력하에 인사교류, 학술포럼 개최, 국제회의 개최 지원, 해외 박물관 지원, 공연·전시 개최, 자료 출판 및 지원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3.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1997년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이다. 재외동포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화 시대 국가 발전을 위한 민족 자산으로 재외동포를 활용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통괄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1996년 6월 외무부 내의 재외동포정책 심의위원회를 격상,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로 개편한 후 제1차 회의에서 재외동포재단법 공포, 1997년 7월 동법 시행령 공포·발효를 거쳐 드디어 1997년 10월 30일 재외동포재단이 발족하였다.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는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목적이자 기본 임무이다. 현재까지 재외동포재단은 민족정체성 유지 강화, 동포사회 조사·협력 강화, 권익 신장 및 역량결집 등 3개 분야 9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